

# 유통가 교섭 갈등 확산... “무조건 회피보다 도급계약 점검을”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민주노총 화물연대,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 요구... 사상사고로 갈등 ↑  
백화점·면세점도 입점 브랜드 판매직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해야  
비알코리아, 180명 선제 직접고용 대다수 기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고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CU (BGF리테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전날 BGF 로지스를 상대로 화물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CU 진주물류센터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중 소속 노동자가 대체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으며 유통업계가 거센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확대되면서 편의점 물류부터 백화점·면세점 입점 업체까지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 ◆ 편의점·백화점 ‘사면초가’

현재 갈등의 최전선은 편의점 업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BGF리테일(CU)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상 사고는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실질 원청으로 보고 있으나 노조는 본사가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가진 만큼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GS25(GS네트웍스), 세븐일레븐(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쿠팡CLS) 등 대다수 유통사 역시 유사한 다단계 위탁 구조를 갖고 있어 이번 CU 사태가 업계 전반의 도미노 과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화점과 면세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점 브랜드

드 판매직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입점 업체 직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입점 업체 모두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 기업별 대응도 천차만별

유통 기업들은 산업 특성과 리스크 노출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선제적 직고용에 나섰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 구조를 바꾼 것이다.

베스칸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협력사 HB주식회사 및 노동조합과 약 3개월간 협의를 거쳐 직접 고용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9일 충북 음성공장 에서 근무 중인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을 전원 직접 고용하고, 고용노동부 총주지정 및 노동조합과 함께 노

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마트와 배달의민족 역시 법 시행 전부터 직고용 전환이나 자회사를 통한 교섭 정례화로 리스크를 관리해왔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CLS 등 택배업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 요청 공고 및 대표 노조 선발 절차에 착수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아직 직접적인 교섭 요청이 없는 대다수 기업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하며 상황을 주시 중이다. 외주 물류 비중이 높은 이커머스(무신사, 컬리)와 하청 인력이 많은 급식업체(삼성웰스토리, 아워홈 등)가 잠재적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교섭 회피보다는 기존 도급 계약의 실질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대응 방식이 향후 산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GDP 반등에도... 물가·비용 동반상승에 2분기 부담

GDP, 전기비 1.7%·전년비 3.6% ↑ 반도체 수출, 설비·건설투자 등 회복 소비심리 99.2... 1년 만에 100 하회

한국 경제가 1분기 예상보다 강한 성장 반등에 성공했지만, 4월 소비심리와 생산단가 흐름은 오히려 2분기 이후를 더 어렵게 가리키고 있다. 반도체 수출과 투자 회복이 1분기 실적을 끌어 올렸다면, 에너지 충격과 물가 불안은 심리와 비용 측면에서 이미 다음 분기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 ◆ 강한 1분기 성장... 4월 심리는 정반대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5.1% 늘었고, 설비투자는 4.8%, 건설투자는 2.8%, 민간소비는 0.5% 증가했다. 제조업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를 중심으로 3.9%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1

스 성장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수출과 투자, 소비가 함께 살아난 반등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1분기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 반등이 그대로 2분기 안도감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신호도 함께 나왔다. 한은이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p) 떨어져 2025년 4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100을 밑돌았다. 100아래는 장기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하락 폭도 가볍지 않았다. 현재경기판단CSI는 68로 한 달 새 18p 급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는 79로 10p, 취업기회전망CSI는 82로 7p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자출전망CSI도 각각 98, 108로 3p씩 내려갔다.

반면 금리수준전망CSI는 115로 6p 올

랐고,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0.2%p 상승했다. 성장률은 반등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 ◆ 물가와 비용, 2분기 부담

심리 악화 뒤에는 물가 불안이 놓여 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2%p 올랐고, 향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는 석유류 제품이 88.8%로 가장 높았다. 공업제품 33.1%, 공공요금 31.4%도 뒤를 이었다.

여기에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월 1.6%, 전년 4.5% 올랐다. 국내공급물가는 2.3%, 총산출물가는 4.7% 상승했다.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불안과 기업이 마주한 비용 상승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1분기 성장한 GDP가 곧바로 2분기 안도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4월 소비심리는 이미 100 아래로 떨어졌고, 기대인플레이션과 생산자물가는 함께 뛰고 있다. 1분기 실적이 과거를 설명하는 숫자라면, 4월 심리와 생산단가는 앞으로를 보여주는 신호에 더 가깝다. 한국 경제는 지금 ‘좋은 1분기’보다 ‘더 부담스러운 2분기’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구윤철 부총리가 이날 첫 공식 회동에서 재정·통화정책의 균형 있는 조합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성장 하방과 물가 상방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시장은 강한 성장률에 먼저 반응하겠지만, 국내 경제가 실제로 마주할 환경은 성장률 그 자체보다 꺾인 소비심리,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 뛰는 생산단가가 겹친 복합 국면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 ‘미토스 쇼크’ 대응 공백 우려... “보안체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정부·학계 긴급 좌담회 열어 하반기 유사모델 등장 가능성도

최근 앤스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촉발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공격 기술에 대응하려면 보안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 하반기 중 유사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수위 높은 경고도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프론티어 AI 미토스 공개보류 사태와 국가 및 기업 사이버 위기 대응 전략’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PwC컨설팅의 공동 주최였다.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지난 7일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는 취약점 탐지를 넘어 실제 공격 코드 생성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샌드박스(격리 환경)를 벗어나 자율적인 해킹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반 공개를 자체 중단했다. 현재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약 40개 기업에 ‘프로젝트 글래스wing’ 형태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날 기초발제를 맡은 이상근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토스와 같은 고성능 AI 등장으로 과거 소수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던 해킹 역량이 이제는 누구나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민주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격 속도도 2018년 평균 2.3년에서 2026년 10시간으로 약 2000분의 1 이상 단축됐다. 2028년에는 분 단위까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교수는 “미토스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유사 모델 등장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오는 7월 앤스로픽이 미토스 모델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할 운영 결과 보고서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임종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대응 공백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 AI와 보안 경쟁력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민관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AI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은 “국회에서 제정한 AI 기본법은 고위험 AI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직접 규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국내 정책은 해킹 대응이나 화이트해커 양성처럼 공격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됐지만, 원천적인 방

어 도구를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조속한 대응 마련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네트워크정책관은 “정부도 미토스의 위험성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인지했고, 보안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AI가 등장했다는 점에 적지 않게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준비가 되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권에는 여전히 레거시 인프라가 많아 기존 취약점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이 핵심 취약점인지 다시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성 기자 msjo@metro

